

# 입지자 단일화... 광산구청장 선거 변수

박수기·이귀순... 차승세·정무창 합  
현직 구청장 vs 단일 후보 선거구도 재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청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이 잇따라 단일화를 하면서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합중연합으로 새판이 짜여지면서 6월 지방선거가 현직 구청장과 단일후보 간 경쟁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기 광주시의원과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3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광산울의 구청장 입지자 3명 중 우선 2명만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공천 심사 일정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 구도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일화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방식으로 오는 5~6월 광산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의 추가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있다.

두 의원 간 단일화를 우선 진행한 뒤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선거 준비와 의정 활동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날 광산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한 차승



박수기



이귀순



차승세



정무창

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도 광주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단일화하기로 했다.

오는 7일 오후 3시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열리는 차 특보 출마기념회를 통해 정 전 의장이 차 특보에 힘을 실는 형태로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장 선거는 현직 구청장과 단일화로 압축된 후보들 간 경쟁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논의와 출

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면서 지방선거가 사실상 조기 레이스에 들어갈게 됐다”며 “지역별 연대·경쟁 구도가 빠르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청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박병규 정장을 비롯해 박수기·이귀순 광주시의원, 차승세 특보, 박광식 전 민행배 국회의원실 보좌관, 정무창 전 시의회 의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돼 왔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전남대학교 융복합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대학·청년 분야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청년 위한 일자리 창출해야”  
통합 대학·청년 시민공청회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광주지역 청년들은 3일 첨단산업 연계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날 전남대학교 융복합에서 ‘광주전남 통합 대학·청년 분야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 김승훈 광주청년위원장을 비롯해 대학·청년 분야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첨단산업 연계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기존 일자리도 임금 상승 등을 통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 촉진, 초·중·고·대학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인재양성,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좋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창업의 마중물을 만들어 지역경제와 산업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라며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학·청년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한병도, ‘5·18정신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달 내 전남광주 통합 등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사진)는 3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6·3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다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총남대전, 전남광주)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

겠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은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남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쉬었을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미진한 입법



한병도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깊이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반드시 반영을”

류기준 의원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사진)은 최근 2026년도 농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증액해, 연 60만원이던 공익

수당을 70만원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6년간 동결돼 있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한 조치로, 농업 경영 여건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류 의원은 “공익수당 인상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벼 재배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충과 직결되는 경영안정대책비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월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벼 경



류기준

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이미 농수산위원회와 농민단체 간 협의

를 거쳐 공유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류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선출되기 전에 전남 농업 예산은 책임 있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포함한 농업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행정통합, 광주 정체성 제도적 보장을”

이병훈 광주특례시 신설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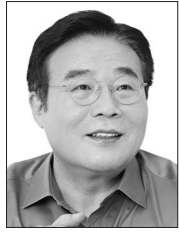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사진)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광주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과정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생존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며 “하지만 전남도와 광주시를 단일 특별시로 통합하는 내용 속에 광주의 역사성, 정체성, 상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우선 행정구조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



이병훈

다는 의견이다. 그는 “광주는 약 140만명 규모의 단일 대도시로 정책, 재정, 도시 계획, 산업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집행해 온 반면 전남도는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각 시, 군이 서로 다른 생활권과 산업 구조를 가진 독립적 기초자치단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통합 구도가 광주시의 법적, 행정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을 통합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광주특례시(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광주를 지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남과 함께 도약하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명창환 전 전남도 부지사, 조국혁신당 입당

“여수 위해 전략적 선택...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전남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사진)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명 전 부지사는 3일 입당문을 내고 “깊은 고민 끝에 여수의 산업·경제·민생 위기를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루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개혁 정치세력이자,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부 탄생에 힘을 보탠 동반자”라며 “기회균등, 정치



명창환

개혁, 저출산 대응, 지방정부 권한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 거대 여당과 정부의 전국적인 자원을 끌어내 여수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명 전 부지사는 오는 10일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인 신미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집중 점검했다.

## 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신미경 후보자 대상 도덕성·전문성 집중 질의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인 신미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최병용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임형석·진호건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함께,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직면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공공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 강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 역량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신미경 후보자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여수여고와 광주보건대학교를 졸업한 뒤 의리기관과 산업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한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여수시노인복지관장과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여수진달래마을요양원장 등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경험해 왔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공공 중심 사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조정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지역 복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청문 결과를 위대로 4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의의를 열어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6월 전남복지재단에서 전환 설립된 이후,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